

“폐기물 땅에 묻었다 파냈어도 불법”

광주시,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업체 검찰 송치 예정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숙박업소 개축현장에서 지난 23일 인부들이 이미 다지기 공사가 끝난 땅을 다시 파헤쳤다.

불법매립한 콘크리트 말뚝이 묻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이었다.

5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점검에서 콘크리트 말뚝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공업체는 “현장에서 중장비를 옮기기 위해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잠시 콘크리트 말뚝을 땅에 묻었을 뿐, 이후 공사를 진행하면

서 말뚝을 빼냈다”는 입장이지만 처벌을 피해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건설폐기물을 잠시 땅에 묻었다가 다시 파냈더라도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사실은 이미 동영상과 시공업체 진술을 토대로 확인했고, 이날 점검은 아직도 묻혀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묻은 것만으로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공사현장은 폐기물 불법매립 외에도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건물손상 등을 호소한다.

공사현장 인근에서 원룸을 운영하는 A씨는 “원래 있던 주차장 건물을 부술 때 지진이 일어난 줄 알았다. 8차례 소음을 측정했는데 4번 기준치를 넘어설 정도로 공사소음이 크다”며 “22일에도 굉음이 울려 입주자들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차장 건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화강질 타일이 들리는 등 300개가 넘는 균열이 생겼음에도 시공사 측은 원래부터 있던 균열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고 시공사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구의 안일한 행정처리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A씨는 “소음이 너무 심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청 관계자는 1시간30분이나 지나서 현장에 도착했다”면서 “또 이들이 도착하자마자 공사가 중단돼 소음을 측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공업체 측은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봉우 기자

‘장대호·고유정 잇단 흉악범죄’ 경찰 “예방 전문화·공동체 치안” 추진

“지오프로스 고도화·편의점 연계 강화”

한강 토막시신 사건, ‘전 남편 토막살해’ 같은 흉악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이 범죄예방 시스템을 전문화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6일 정례 간담회에서 “범죄취약지역·시간대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결과를 토대로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주민 맞춤형 탄력순찰을 통해 범죄불안요인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공간통계와 범죄데이터를 접목해 위험지역을 예측하고 수사·예방에 활용하는 시스템인 지오프로스(GeoProS)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또 주거단위 근처에 있는 편의점 등과 연계해 범죄신고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늘려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만들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112종합상황실에서 현장을 체계적으로 지휘하고 지원해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각 경찰청과 지방청에 ‘종합대응팀’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높아진 국민의 요구와 기대 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경찰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갯벌 등급 5개로 구분해 관리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27일~10월 8일까지 42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갯벌법’ 시행령안은 24개 조문, 시행규칙안은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먼저 갯벌 등급을 5개(최우수, 우수, 양호, 주의, 관리)로 구분했다. 등급이 지정된 갯벌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복원사업 등을 실시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또 청정갯벌의 지정 기준도 마련했다. 청정갯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어업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어장구역으로, 자율적인 관리방안이 있어야 하고 중금속 함유량 등의 환경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만 포장·용기 등에 청정갯벌 생산 수산물임을 표시할 수 있다.



수확의 계절 26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읍면의 들녘에서 농부가 노랑계 익은 벼를 수확하고 있다. 이날 수확된 벼는 조생종으로 일반 벼보다 수확기가 한 달가량 빨라 추석용 햅쌀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동정지 한빛 1호기 압수수색...檢 “증거 보강 위해 실시”

최근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6일 “최근 진행된 한빛원전 압수수색은 ‘증거 보강 차원’이라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지난 22일 오전 10시45분부터 6시간동안 한빛1발전소 안전탑과 계측제어탑, 발전운영탑, 한빛본부 기획총무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관련자 3명의 컴퓨터와 서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원자력안전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 1호기는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30분쯤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시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해

18%까지 급증했다.

한수원측은 원자로는 같은 날 오후 10시2분쯤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한수원 특별사법경찰관 조사 결과 원자로 수동정지 과정에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설비 운전자가 원전 제어봉을 오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면허자의 직접 운용 또는 감독·지시 하에 제어봉 조작이 이뤄져야 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한수원은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면 즉시 원자로를 정지하도록 규정된 원안법 제26조 ‘운영기술지침서’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원안위 역시 출력급증 상황을 보고 받고도 12시

간가량 원자로 가동을 멈추지 않았다.

한수원 특별사법경찰은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 법적 위반과 운전조작 미숙 등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한빛원전 범영광군민대책위원회에서도 원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지난 6월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한수원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만큼 보다 확실한 증거 보강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슈 판결

“월 수익 30% 보장”...9억 뜯은 유명 입시미술학원장 ‘징역 2년’

“대부분 채무 변제에 사용...동종 범죄 없는 점 참작”

미술학원 및 이모터론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3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서울 강남의 유명 미술학원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 유명 M 입시미술학원 대표 장모씨(50)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씨는 “M 미술학원은 서울, 부산, 대구 장원에 지점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300만~600만원과 수익금 약 30%를 주겠다”며 “카카오톡, 네이버 등에 이모터론을 공급하는 사업을 구상 중인데 돈을 빌려주면 지분 50%를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가 2015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만 9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장씨는 당시 금융기관 채무만 7억원 이상 있었고, 사채도 10억원에 이르러 국민연금 등을 체납

하는 상환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흉대지점을 설립하는 등의 사업 현황과 채무를 숨기지 않았고, 투자받은 9000만원을 이모터론 사업에 투자금을 모두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간섭이나 강제집행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점 피고인 자격으로 피해액을 변제하기 어려운 점 스투자금 대부분을 사업이 아닌 미술학원 운영,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피해자들에게 시인한 점을 들어 장씨에게 편취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정 기간 이자 내지는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며 “다만 피고인은 미술학원 사업과 관련된 사건 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초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다면,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